

		<h1>보 도 자 료</h1> <h2>3월 19일(화) 조간</h2>	
배 포 일	3월 18일(총4매)	담당부서	연구정보팀
원 장	박 용 주	전 화	02-6007-9174(지은정 부연구위원)
연구정보팀장	정 진 울		

세대간 일자리 대체?

중고령자 고용 증가할수록 청년 일자리 늘어난다.

“OECD 15개국(한국포함)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” 분석 결과

- 한국노인인력개발원(박용주 원장)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“OECD 15개국 (한국 포함)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.
- OECD 15개국(한국포함)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(1990~2010년), 중고령층(55~64세)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(15~24세) 고용률도 높게 나타났다.
- 최근으로 올수록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아졌지만, 이는 추세일 뿐 변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고령자의 고용이 청년층 고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-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오히려, 경제성장률, 노동생산성,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로 나타났다.
- 그동안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물러나면, 청년층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‘세대 간 일자리 대체설’이 논란이 되었으나,
- 분석 결과, 세대간 일자리는 ‘보완관계’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본 연구는 OECD Statistics, OECD의 STAN Industries Data, OECD Employment Policies and Data, OECD Employment database, OECD Social Expenditure Dataset, OECD Health Data자료(1990~2010년)를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OECD 15개국(호주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캐나다, 덴마크, 핀란드, 독일, 이탈리아, 네덜란드, 스페인, 영국, 미국, 스위스, 한국, 일본)을 분석한 연구결과이다.

□ 청년 일자리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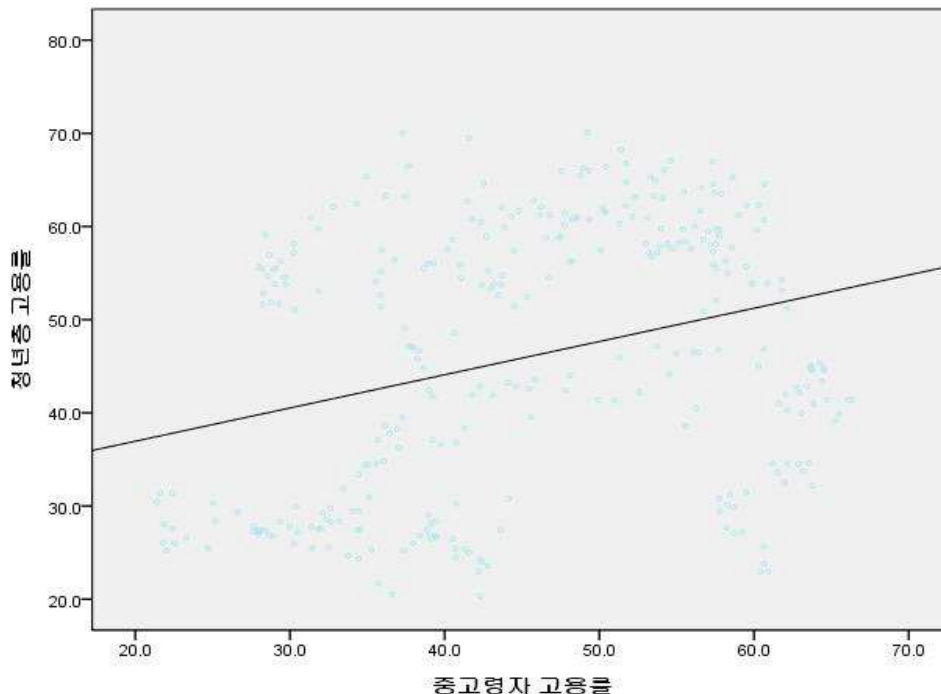
- 청년층 고용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.
- 따라서 청년 일자리창출이 올해도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.
- 문제는 어떻게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것인가로 압축된다.

□ OECD 15개국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

- 그동안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을 물러나면, 청년층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았다.
- 그러나 55~64세 중고령자 고용률 평균(46.9%)과 청년층 고용률 평균(48.43%)이 비슷하다.
- 중고령자와 청년 모두 2명 가운데 1명도 취업상태가 아님을 볼 수 있다. 고용위기는 청년층만의 문제 혹은 중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니라, 중고령자와 청년 모두의 문제임을 말해준다.
- 또한 OECD 15개국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면(1990~2010년, 한국 포함), 중고령층(55~64세)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(15~24세) 고용률도 높게 나타났다(그림 참고).
- 최근으로 올수록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아졌지만, 이는 추세일 뿐 변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고령자의

- 고용이 청년층 고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- 조기퇴직으로 중고령자들이 일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, 그 자리를 청년층이 취업하여 청년층의 고용증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.
 - 오히려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청년층 고용률도 높아져 보완관계를 보인다.

[그림] 중고령층 고용률과 청년층 고용률 관계



□ OECD 15개국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- 청년층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오히려 경제성장률, 노동생산성,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로 나타났다.
- 즉,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중고령층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가 아니라, 노동생산성 향상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청년층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.
-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, 자원이 같더라도 숙련도가 높아져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데, 생산단위당 필요노동을 줄임으로써 숙련도가 낮

은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.

- 또한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역시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제조업은 축소되고 서비스업이 확대되었지만,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.

-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“청년층 고용의 실마리는 조기퇴직정책이 아니다”라며, “세대간 일자리 대체설에 따라 중고령층 고용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, 노동생산성 향상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증대가 청년층 고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”고 밝혔다. “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(생산자 서비스업, 사회서비스업 등)을 중심으로 육성해야 청년층 고용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,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층 고용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”고 제안하였다. “나아가 중고령층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 고용률도 높아지는 것을 볼 때, 정년연장을 포함한 중고령자의 고용정책이 청년 실업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”고 말했다.